

“실업대란 방치뎨 국가재난 수준 위기…추경 협력해달라”

文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뭘 담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의 끝으로 내몰린 청년·저소득층의 암담한 고용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취업준비생과 부모에게 “다음 생애에는 공부 잘할게요”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 과로사로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 등을 거론했다.

특히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시정연설 사상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하는 성의를 보였다. 청와대는 30여분 간의 시정연설 내용에 맞춰서 총 22장의 슬라이드 자료를 별도로 준비했다. 청와대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짧은 문구와 함께 어려운 민생을 보여주는 감성적 이미지와 그래프·도표를 활용한 통계 수치가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고용 절벽’에 대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약 11조2000억 원 규모인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기획재정부의 실무자 수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고 다음으로 여성, 어르신, 지역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심각한 고용상황과 소득 불균형으로 가장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추가 반영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만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신 때 각 당이 공통으

목숨 끊은 취업준비생 사연

과로사 집배원 거론 감성 호소

PPT 활용 추경 필요성 역설

민주당 15차례 박수 호응

한국당 사과 요구 피켓팅 항의

로 제시한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차례 박수로 호응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박수 없이 시정연설을 경청했으며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4분께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분회의장에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또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연단으로 들어가는 통로 쪽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다시 박수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김성원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휴대전화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모습을 찍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강경화 후보자 등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아 문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사피해 협치 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회의장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며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약속 5대 원칙 대통령은 이행하라’, ‘야당 무시 일방통행 인사참사 사과하라’라는 피켓 문구를 컴퓨터에 붙인 채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분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했다. 이어 퇴장하면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인사했고 분회의장 뒤편을 돌면서 야당 의원과 일일이 악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몸 낮춘 당·정·청, 야당 설득 ‘인해전술’

추경 처리·인사난맥 풀기

文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남

靑정무라인 여의도 총출동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12일 일자리 추경과 청문 정국 돌파를 위해 야권을 상대로 인해전술에 가까운 설득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나 민생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정연설도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졌고, 추경 시정연설은 관행적으로 총리께서 해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하기로 한 것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성의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간담회에는 정세균 의장과 심재철 부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

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지연으로 잔뜩 꼬인 인사청국을 풀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먼저 낮은 자세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강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전병헌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인 여의도도 총출동, 대야 설득전을 전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청문회 및 추경 문제에 대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 참석하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 야당들의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결국 ‘지명철회’와 ‘일명 강행’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낮은 자세’로 야당 지도자 설득에 나선 마당에 문 대통령이 야당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문 대통령은 강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정국경색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야당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문 대통령에게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명분만 제공하고, 정국경색의 책임은 야당이 지는 상황이 빚어질 공산도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여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 질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김이수·김상조·강경화…청문 보고서 채택 줄줄이 무산

文대통령 임명강행 여부 주목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정부위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세 차례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음에 따라 시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4당 간사 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 후보자 채택시한은 14일로 이를 정도 시간이 더 있으나 민주당의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야당들의 반대 입장도 견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상태라 13일부터는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이후) 기준 보증금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이후) 기준 보증금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000ml 이상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